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4. 6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재정·세제

- ☐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24.7.1.)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24년 하반기)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24.7.1이후)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2. 교육·보육·가족

-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❶과 이자면제 범위❷ 확대('24.7.1.)

❶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❷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24.9.27.)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 스톱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24.7월)

*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

** ('23년) 6개 시·도 → ('24년) 전국 17개 시·도



3. 보건·복지·고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24.6월, 지자체별 상이)
 - *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24.7.1.)
 -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 * 가 기존('23년) 3개소(서울, 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12월까지 순차 추진)
 - *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4. 문화·체육·관광

-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24.7.26.)
 - * ('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여 여권발급 비용 인하*('24.7.1.)
 - *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
-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4.7.1.)
 - * 면제 기준연령 :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개편) 12세 미만 면제

5. 환경·기상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24.7.1.)
 -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mu\text{g}/\text{m}^3$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24.11월)
 - *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
(확대)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
-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24.12월)
 - * (7개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기존),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 ** (3개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내비(기존) + 아틀란 / (관측망) 55개소(기존) → 259개소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24.7.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 * (1차) '24.7월, 0.5%p 인하(3.7%→3.2%), (2차) '25.7월, 0.5%p 추가 인하(3.2%→2.7%)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4.7.10.)
 - * ①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②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
 - ③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24.8.21.)
 -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7. 국토·교통

- 1기 신도시(5곳①)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②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③(공모 6월, 선정 11월)
 - ①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 ②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 ③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4.7.17.)
-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4년 하반기)

8. 농림·수산·식품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7+연장9)으로 확대('24.7.3.)
- *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개선) 16년(7+3+3+3), 「농지법시행령」시행('24.7.3)
-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24.10월 예정)
-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24.7.1.)
- *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9. 국방·병무

-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24.7.10.)
- *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 실시

-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 출시('24.7월 중)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4.7월)

* ① 지원센터 :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확대) 11개 지역(기존 +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② 프로그램 :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10. 행정·안전·질서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24.9.30.)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27.)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

-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

* ①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발췌)

◎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추진배경 : :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내 외환시장을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구조로 전환 추진
- 주요내용 :
 -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국수출입은행 운용)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 ❖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¹⁾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²⁾ 및 경제안보서비스³⁾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 1)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 2)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원재료(부처 지정)
 - 3)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서비스·기반 시설(부처 지정)
- ❖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1차)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2024년 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추진배경 :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기금의 출범 및 자금지원 개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로그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https://econedu.go.kr>)'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 추진배경 :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 정부 · 공공 ·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 연계
 -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최신 학습자료 제공
 - 개인 연령 ·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강화
 - 경제교육 교사,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 공유 및 소통채널 제공
- 시행일 : 2024년 6월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2024년 7월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주체) 관세청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 · 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 · 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주요내용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합니다.

- ❖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11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 ❖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 주요내용 :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경제안보품목: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 ❖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



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대될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 또한, 2024년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 추진배경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예정(6. 27.)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개편
- 주요내용 :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안보품목 개수 확대 및 안정화 지원 강화
- 시행일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024. 6. 27.)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 13

◎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2024년 7월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의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됩니다(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 ❖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추진배경 :
 -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요구
 - 이에 따라,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 :
 - (면제대상 확대)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부과금액 인하)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구분	당초	개편
면제 기준연령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12세 미만 면제
부과금액	공항 1만원, 항만 1,000원	공항 7,000원, 항만 1,000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합니다.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
-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 부담금 부과율: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30%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20%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시행일 :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



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5월 31일

◎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확대) 비철금속류 스크랩

❖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

- 제도개요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추진배경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을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확대
 -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배 상향(2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 전자상거래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서 신고 항목 등이 간소(57개 → 27개)한 간이수출 신고가 가능하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이므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

- ❖ 2024년 하반기부터 4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개정·적용

- 추진배경 :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그간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 향상을 고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 조달청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합니다.

❖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도급**과 매매로 구분하기 어려워 2011년 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등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 (도급의 정의)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하지만, 「인지세법」 및 「민법」에 따르면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지침

- 추진배경 :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 마련 추진
- 주요내용 :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 →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 비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할 경우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현재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으로 선정하여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방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도 공공비축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추진배경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비축사업 참여 시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공공비축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2024. 5.)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의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 ❖ 유튜브(YouTube)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대형 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 추진배경 : 건설사업 심사제도의 특성상,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커 부정한 청탁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책임감·신뢰도 높은 심사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
- 시행일 : 2024년 6월(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 ❖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 (기존) 연 4회 공모, 특허요건 필수 → (개선) 상시 공모, 시급성·시장 상황에 따라 특허요건 완화
- ❖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및 신청요건 완화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2024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기존에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의 상용SW도 중소기업 상용SW와 동일하게 제3자단가계약(수의)을 체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 앞으로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 SW와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용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경쟁합니다.
- ❖ 중소기업은 이전과 같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중소기업 SW기업 보호 및 SW산업 기술성 경쟁 강화
- 주요내용 : (계약대상) 외산·대기업·중견·중소공급 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SW는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중 선택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지식재산공제에 소액납입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



- 비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 ❖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소액납입제를 도입하여 월 10~20만원의 소액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 ※ 기존에는 부금월액(30~1,000만원)·부금총액(1,500만원~5억원)으로 운영
- ❖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약관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 (소액납입제) 적립형 공제의 최저 부금월액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 (§ 8③)
 - (대출 사유 확대) 약관상 지식재산비용대출 기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예정)

◎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 *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법 시행 후 6개월 전(2025. 1. 2.)까지]부터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③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

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3. 7. 18. 제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주요내용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규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



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됩니다.

- ❖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 주요내용 :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됩니다.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 ❖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합니다.
- ❖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12일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 추진배경 :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
- 시행일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일(2024년 6월)부터 시행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예정)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맞춤 안내하여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합니다.

- ❖ (편의성 확대)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고
- ❖ (정확성 제고)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을 확대하고,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며
- ❖ (접근성 강화)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추진배경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 마련
- 주요내용 :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4년 6월 30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024. 1. 23.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¹⁾·주요주주²⁾)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³⁾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 1) 이사·감사및사실상임원업무집행책임자등
 -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약증권 등 포함
- － 매매예정일 30일(잠정)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및거래기간등을공시하여야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완료시확정

** ○ 시행일 : 이후 30일(잠정)간(2024. 7. 24.~8. 22.)은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

동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되어,

❖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주요내용 :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30일(잠정) 전에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 (금감원·거래소)하도록 의무 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 그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됩니다.
 - (진입)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벌금형 이상)한 경우에도 진입이 제한됩니다.
 - (영업)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이 금지됩니다.
 - (퇴출)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최근 5년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소비자보호법령」(벌금형 이상)을 위반한 경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 ❖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 또한,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 추진배경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 주요내용 :
 - (통장협박)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허용



- (간편송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2024년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 2024년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 고금리 시기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부담 절감
-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까지 확대
- 시행일 : 2024년 9월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합니다.

- ❖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자금 위주) 수요가 있는 경우
- ❖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Delta 0.8 \sim \Delta 1.0\%p$, 중소·중견 $\Delta 1.2 \sim \Delta 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합니다(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추진배경 :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신설)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투자에 대해 시중 최저수준 금리 제공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로 확대)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 과 함께 신규펀드 8,000억원을 추가 조성(총 1.1조원)
- 시행일 :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 생태계펀드도 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지난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 ❖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이 의무화되고,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우대금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 추진배경 :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 기술금융 사후평가(품질심사평가) 평가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 시행일 :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시행되었고,

- ❖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한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 ❖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 주요내용 : 정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형사처벌,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은 구조금 신청
- 시행일 : 2024년 9월 27일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앞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됩니다.

-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규정된법률상벌칙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
- ❖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다만, 금번 변경 사항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 추진배경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
- 주요내용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및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 (지원수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추진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제도 활용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 환경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됩니다.
-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기준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를 도입·시행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요 :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증 의무대상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

- ❖ 2024년 7월 24일부터 간편인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된 인증항목, 비용으로 완화된 부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항목: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도입·시행

- 추진배경: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법제·의무화하여 운영 중이나, 많은 인증항목,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주요내용: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경량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시행
 - 적용대상: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활력법」이 시행됩니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3. 12. 20 개정, 2024. 7. 17 시행).

- ❖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 ※ (기존) 5개 유형(공급과잉 해소·산업위기 지역 대응·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 → (개선) 6개 유형(기존+공급망 안정)
- ❖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합니다.

- ※ (상법)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계열사 지분을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oneshot.or.kr)에서, 신청 방법과 주요 지원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재편 지원제도 보강

- 추진배경 : AI 부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
- 주요내용 : 「기업활력법」 적용기한·대상·특례범위·지원체계 대폭 보강
 - (적용기한) 한시법(前: 2024. 8. 일몰)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사업재편 지원 유형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
 - *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 (변경) 기존+공급망 안정
 - (특례범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
 -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시 절차 간소화(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 보강
 -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등 참여)를 구축하여 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결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추진배경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주요내용 :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이 가능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습니다.
 -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

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유예 불가한 경우를 既규정: ①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②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등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중견·중소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 주요내용: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 →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을 신설합니다.

- ❖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역량 축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 추진배경: 글로벌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현지화 축진을 위해 해외 시장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주요내용:
 - (시장조사·분석) 글로벌 시장경쟁력 분석 및 전략 도출을 통해 해외시장 현지화 또는 다변화 성공 가능성 제고
 - (R&D) 시장조사·분석 결과 활용하여 목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 (현지 사업화 실증) 실제 해외진출국에서 개발기술(제품) 검증 및 적용 효과 확인을 위한 실증 지원
- 시행일: 2024년 7월 초(사업공고 예정)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산업분류) 2017년 10차 개정 이후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개정한 11차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7월 1일에 시행한다(고시일 2024. 1. 1.).

❖ 이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등 산업

** 콩나물 재배, 타이어 재생, 사진 및 영상기, 전자악기 제조, 복사업 등 산업

■ 표준분류 작성 관련 규정

- 개정 근거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 주요내용 :
 -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 고시·시행 :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국제 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기존에는 해외진출·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위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에 법무부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정부 지원이 급

감하는 지원절벽을 완화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원절벽 완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필요
- 주요내용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8월 7일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 ①PEF 설립, ②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1/3 미만 점입, ③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④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기업 등의 불필요한 신고의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유형에만 심사역량이 집중되어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8월 7일부터는 기업들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되므로,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입니다.



※ 단, 최종적인 시정조치는 제출된 방안의 내용을 고려(필요시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부과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 추진배경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 면제
 -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